

경제위기 대응의 정치경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

윤진표* / 김은영**

- I. 문제제기와 분석틀
- II.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
- III.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
- IV.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과정
- V.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의 배경요인 비교
- VI. 맺음말

I. 문제제기와 분석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해 왔던 동남아 경제는 1997년 7월 태국에서 촉발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태국에 이어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경제위기는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으며 외국자본의 대량유출과 환율 및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진행되면서 신용경색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게 되었다.(권을 1998; Delhaise 1998)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 각광받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몰락은 경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부패와 정경유착 등 동남아시아 정치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원인이었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Arndt and Hill 1999; Pempel 1999; Pasuk and Baker 1999; Milne and Mauzy 1999)

*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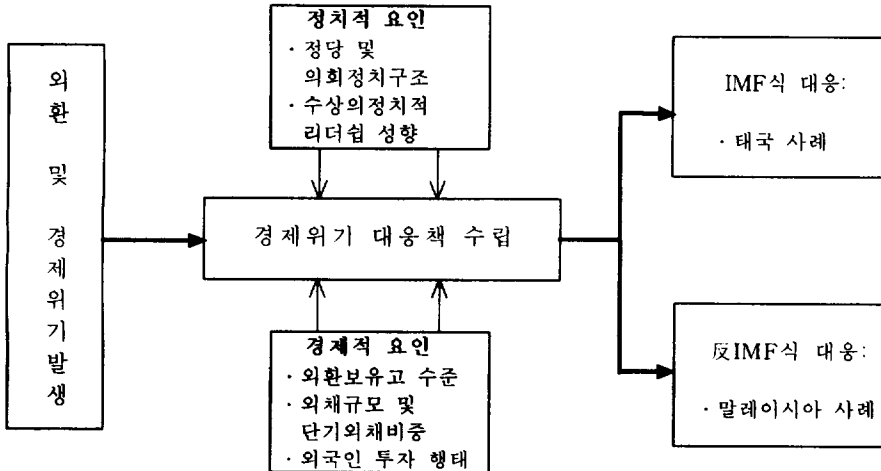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판이하게 달랐는데 태국의 경우 IMF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방이라는 IMF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서방 투기자본이 동남아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며 IMF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본통제와 고정환율제라는 反 IMF식 처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같은 동남아시아의 인접국가로서 유사한 경제수준과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대응에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 발생 후 3년이 지난 지금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를 단기간에 나타난 단순한 계량적 수치로만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양국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 정상적인 궤도를 찾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의 방식이 옳았는지, 말레이시아의 방식이 옳았는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접어두고, 과연 어떤 요인이 양국이 판이하게 다른 경제대응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외환유동성위기라는 동일한 충격에 경제환경이 유사한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상이한 처방을 보인 것은 단순히 경제문제라고 하여 경제논리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경제발전 모델이 적용되더라도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으며,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지도자라는 점에서 볼 때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에 대한 상이한 대응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경제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상이한 정치체제와 리더십의 차이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을 양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주장하고자 한다.

〈그림 1〉 경제위기 대응의 정치경제 분석틀



II.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

1. 태국 정치의 특징

태국은 1932년 쿠데타로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이후 거듭된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으로서 왕과 내각의 책임자로서의 수상을 축으로 하는 의회정치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 정치는 분열된 다당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오랜 군부권위주의체제 아래 정당정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을 통한 권력과 이권추구 목적 때문에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과거부터 태국의 정당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영향력있는 정치인 개인의 이해를 좇아 정당이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당이 특정후보가 선거에 임

하기 위해 창당되는 등 철저히 현실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당이 개인이나 파벌집단의 이익이 보장되지 못할 때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김홍구 1999, 254) 태국의 정치는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이념상으로도 진보 및 보수의 구분을 짓기 어렵고 정책적 특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간의 이합집산, 의원들의 정당가입과 탈퇴, 이당(移黨) 등이 일반화되어 있다. 현재도 태국에는 주요 정당들만 10개 정도가 있다.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부재로 인한 연립정권의 구성은 태국정치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실이며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또한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한국태국학회 1998, 129)

태국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태국 정당정치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지배적인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태국의 정당정치구조로 어느 정당도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늘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집권해 왔다. 그러나 연립내각은 태국 정당정치의 특성상 개인적 또는 파벌간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연립내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구성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의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수상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태국의 실질적인 정치권력의 핵은 내각의 수반인 수상에게 있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강력한 지위를 가지는 국왕, 군부, 관료의 존재는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 여타 입헌군주국의 국왕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데 비해 태국의 국왕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1980년대 들어 태국 국왕은 정치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고 정치적 위기 시 국왕의 권위를 발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체제의 구심점이며, 태국의 정체성과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 태국정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전통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윤진표 1996, 39-41) 1992년 5월 민주화항쟁 이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많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정치경제의 핵심 기득권 세력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태국에서 왕실을 제외하고 관료체제는 유일하게 영속성을 유지하고 제도화되어 있는 집단이었다. 최근 들어서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새로운 비관료 단체들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됨으

로써 관료가 차지하고 있던 독점적 역할은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관료는 아직도 정책의 방향결정과 수행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홍구 1999, 250)

이와 같은 태국 정치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상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한편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는 제도적 뒷받침보다는 수상의 개인적 인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차왈릿(Chavalit)수상이 사임하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구성되어 민주당 당수인 추언 립파이(Chuan Leekpai)가 태국의 새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추언은 개혁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진보적 리더이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대학시절에도 절에서 기거하며 독학으로 공부한 추언은 청렴한 정치인으로 평판이 나있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1968년 선거에 단돈 3만 바트(7백 50 달러)로 트랑주 민주당 최연소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76년 법무차관과 총리실 장관에 임명되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행정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추언은 1992년 선거에서 태국 국민들에게 수상이 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았으며 1992년에서 1995년까지 2년 8개월간 문민정부를 이끌기도 했다.

1997년 7월 바트화의 폭락으로 야기된 최악의 경제위기로 인해 차왈릿이 새 헌법을 수용하고 사임하게 되자 추언의 민주당 주도하에 1997년 11월 14일 6개 정당 연립정부가 재구성되었다. 추언 수상은 IMF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처키 위한 금융체제의 개혁, 재정적자 해소, 실업대책, 수출증진과 관광산업의 촉진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추언은 투명한 정책과 깨끗한 행정을 최고의 목표로 하였으며, 공개행정으로 모든 문제를 가식없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2.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인 국왕을 최고 통치자로 하는 연방제 국가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해 왔으며 현 마하티르(Mahathir)수상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발전을 누려왔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종족 사회로서 종족갈등이라는 풀기 어려운 정치적 과제를 종족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대연합을 구축하고 종족집단 엘리트들간의 협의와 타협에 의해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군주제는 9명의 술탄들이 각각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채 국왕은 5년 임기제로 돌아가면서 맡는 독특한 제도이다.(양승운 1998, 43) 내각의 수반인 수상은 하원 다수당 당수를 국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내각의 구성은 철저하게 종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형상으로는 종족간의 연립정권이면서 수상, 부수상을 비롯한 내무, 외무, 국방, 재무 등의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다수 종족인 말레이계가 독점하고 있어 정치적인 면에서 말레이계의 우위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행정부의 존재에 있다. 여당의 총재이자 수상이 이끄는 행정부는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와 당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통해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초헌법적인 조치는 법원의 위헌심사권에 따라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관련 헌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부 조치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편의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내각 책임제 하에서 의회는 상대적으로 그 권한이 미약할 뿐 아니라 종종 정부와 밀착되어 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보조적 역할로 전략하는 사례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당은 복합민족 국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종적,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원화된 다당제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정영국 1996, 93) 1969년 종족폭동의 경험은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중앙정부가 사회통합과 정치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이선향 2000, 69-70) 이로써 말레이시아 정치는 UMNO의 패권적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당구도, 즉 국민전선 체제(NF : National Front)로 전환되었다. UMNO는 국민전선 출범과정에서 MCA, MIC, 말레이시아 회교당(PAS), 국민운동당(Gerakan), 사라와크 통일인민당(SUPP), 인민진보당(PPP) 등 거의 모든 정

당들을 새로운 연합체제에 참여시켰다.

정부를 대표하고 내각을 책임지는 말레이시아의 수상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영미형과 달리 UMNO의 당수를 겸한 수상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권력까지 보유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말레이시아의 수상이 여타 국가에 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은 UMNO 중심의 독특한 정당정치 구도와 위계적인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마하티르 수상은 전임 수상들과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인 UMNO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스타일에 있어서 전임자들과는 판이하게 구분되는 인물이다. 런던에서 교육을 받은 전임 수상들과 달리 싱가포르 소재의 말라야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더욱이 전통적인 말레이 엘리트그룹과의 혈연적 연계가 전무한 마하티르는 1981년 말레이시아 사상 최초로 평민출신으로 수상이 되었다. 마하티르는 18세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 법률을 전공하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부유한 귀족이 아니라 학교 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영국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후 자연스럽게 마하티르는 반영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자각은 마하티르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주었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인의 우수성과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¹⁾ 마하티르는 서양과 동양은 분명히 다름에도 서구 강대국이 민주주의나 인권, 환경문제 등 자신들의 잣대를 내세워 약소국을 지배하고자 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이 내세우듯 성급한 민주화보다는 산업화가 우선이며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본다.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에 봉착한 마하티르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안와트

1) 마하티르는 자신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이유를 최근 출간된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시아인 대부분은 유럽 식민통치자들에게 대해 열등감을 갖고 독립은 생각조차 못했다. 아시아인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됐고 아시아 경제는 유럽 국가들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종속적인 경제구조로 고착되어 갔다. …………… 그러다 1941년 일본인들의 침략이 우리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일본군이 영국군을 물리적으로 쫓아냈을 때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바뀌었다. 전쟁 초기 일본의 승전소식은 우리의 사고를 트이게 한 사건이었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있고 유럽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마하티르, 최우철 역,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회고록” 『월간조선』 1999년 8월 참조

부수상을 해임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맞았으나 2년이 지나 경제가 어느정도 호전되면서 국민들의 反 마하티르 성향도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이에 마하티르는 1999년 11월 11일 의회를 해산하고 당초 2000년 6월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앞당겨 11월 29일 실시하였다. 총선에서 집권연정인 NF는 전체 하원의석 193석 중 148석을 확보해 개헌선인 2/3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안와르 전 부총리의 부인인 아지자(Azizah Ismail)가 이끄는 야당연합 대체전선(AF)과 AF와 제휴한 군소 정당들은 모두 45석을 얻는데 그쳤다.(정재완 1999, 37) 이로써 마하티르는 5번째 총리연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23년 장기집권에 돌입하였다.

3.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치의 비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정당구조는 다당제이다. 정치제도 상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치는 판이하게 다른 양태를 보인다.

정당의 제도화의 측면이나 정당의 위상 면에서 말레이시아가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당은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정당의 기회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반복하였다.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태국정당정치 구도 상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집권해 왔다. 정권을 주도할 우세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연정 파트너들간 갈등과 탈퇴,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등으로 연립정권에는 늘 정치적 불안정이 내재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종족과 종교에 따라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지만 태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집권여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말레이계의 대표 정당인 UMNO와 중국계 대표정당인 MCA, 인도계 대표정당인 MIC를 주축으로 하는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해 왔다. 다종족 사회로 항상 종족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정치

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세한 거대여당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야당의 존재는 정권교체는 물론 여당 견제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지배정당인 UMNO가 주도하는 거대 여당이 존재함으로써 태국과 같은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양국간의 정당정치 구조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차이로 연결된다. 내각의 수반이며 실질적 통치권자인 수상의 지위는 출신정당의 영향력에 따라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불안정한 내각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태국 수상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수상의 출신정당은 의회 내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수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는 역부족이며, 연립내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립정권 구성정당간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해야 함으로 수상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말레이시아의 수상은 압도적인 여당을 기반으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누린다. UMNO는 말레이인의 수적 우세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독립 이후 말레이계 우위의 권력구조를 공고히 해왔고 야당의 견제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는 NF의 정치이며 NF의 정치는 곧 UMNO의 정치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UMNO의 총재인 수상은 최고 통치권자라는 위상에 맞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치구조적 요인에서 오는 양국 리더십의 차이뿐만 아니라 태국의 추언 수장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장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른 리더십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추언 수장의 경우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진보성향의 지도자이다. 추언 수장은 태국정치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태국정치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추언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등의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세계화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태국의 추언 수장이 개혁·개방을 통해 서구형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데 반해 마하티르는 반영, 반서방 감정을 가지고 아시아적 가치를 신봉해 왔다.

마하티르는 서구의 잣대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평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아시아인의 우수성과 아시아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마하티르는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계속 집권하려는 것은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의 집권기간이 긴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정부가 권위주의적일 수도 있다는 지론을 펴왔다. 이처럼 태국의 추언 수상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각각 개혁·개방에 있어 서로 판이하게 다른 리더십 성향을 보여주었다.

III.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

1. 태국 경제구조의 특징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던 태국은 80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통해 공업화와 놀란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태국의 수입대체전략(ISI)은 수출지향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지향전략(EOI)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예를 들면, 수출과 관련된 각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수출품에 대한 각종 세금과 관세의 인하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태국 관광청과 수출진흥청과 같은 수출지원기구가 창설되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투자러시는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 가치절상,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 등의 현상으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자 우회 생산 수출기지를 구하여 대거 동남아 지역으로 향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과 더불어 1988년 등장한 찻차이 정부는 경제확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태국의 투자분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80년대 초 만해도 일차 상품의 생산·수출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단작성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태국경제는 양적인 확대만이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주요한 변화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수출구조의 변화이다. 태국에 있어서 제조업 부문의 수출은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

장의 엔진이었다. 과거 세계 제1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태국은 공업화로 산업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수출산업구조가 공산품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1980년 당시 약 1/3을 차지하였던 제조업 수출비중이 1997년에는 80% 이상에 달하였다.(박영호 1999, 5-6) 둘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섬유, 가전, 식품산업과 더불어 화학, 철강, 자동차 조립, 전자부품, 기계공업 등 중화학 공업이나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투자러시 과정에서 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비롯됐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외국 기업과 합자형태로 해당 분야에 태국계 재벌들이 진출함으로써 나타났다. 셋째는 자본시장의 정비와 금융자유화이다. 정부는 1990년에는 IMF 8조국이 되었으며 90년대 초반부터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1993년 3월에는 방콕 역외금융센터(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BIBF)를 창설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장려법과 같은 뒷받침 외에도 공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특히 일본과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태국기업과의 연계망 구축, 동부해안공단 건설, ASEAN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같은 여러 정책이 입안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던 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여기저기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집약 산업, 특히 섬유산업이나 전자조립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기 시작했고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입과 함께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대거 건설되어 태국 전체를 달궜던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박번순 2000, 53) 이런 가운데 태국경제는 1997년 뜻밖의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적을 들 수 있다. 태국경제의 경쟁력 상실은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 적시에 이행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0여 년에 걸친 고도성장으로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 노동집약적인 주력 수출산업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인도, 베트남, 중국의 추격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침체와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을 가져왔다. 경상수지 적자는 1994년 84억 달러에서 1995년과 96년 중 140~1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경상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비율은 1994년의 5.6%에서 1996년에는 8.0%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1994년 외환위기 당시의 멕시코(7.8%)보다 높은 수준이며 IMF 경고수준 5%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태국은 수지적자 보전을 위해 외자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외채부담이 가중되었다. 1994년 태국의 총 외채 규모는 GDP의 38%였으나 1997년에는 GDP의 55.5%로 1997년 6월말에는 81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부진과 금융불안으로 인해 국제적 투기자본은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태국은 해외금융자본의 투기적 공략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고정환율제를 고수한 정부의 환율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다. 1984년 이후 태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고정환율제도에 가까운, 즉 바트화를 미국의 달러화에 연계시키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중반 이후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되면서 미달러화에 연계된 태국통화는 실질환율의 절상으로 태국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력 수출상품인 전기, 전자제품과 경공업제품이 태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평가절하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셋째, 후진적인 금융산업과 과도한 자본자유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 태국은 80년대 후반 이후 외자추진과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을 과감히 추진해 왔다. 유입된 외자는 태국경제의 태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나 후진적인 금융제도하에서 급격한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것이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노상욱 1998, 27) 특히, 1993년에 개설된 방콕역외금융센터(BIBF)의 설립은 불안정한 단기 해외차입금의 급증을 유발, 외환위기의 촉매역할을 했다.²⁾

2) 1980년대 말 찻차이(Chatichai) 총리는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에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인도차이나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방콕역외금융센터(BIBF)를 설립했다. 그러나 BIBF를 통해 대규모 외자가 태국으로 유입되었으나 외자의 비효율적인 운영, 취약한 금융시스템, 경직된 환율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전반에 거품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권경덕, “태국역외금융센터의 현황과 향후 운영과제,” 『KIEP 세계경제』, 2000. 3.

1996년부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기업 수익의 악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했고 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면서 외자가 급격히 유출되었다.(박은홍·김지훈 1999; 안종량 2000) 이와 같이 태국의 경제위기는 급격한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과도한 외채, 거품경제의 붕괴,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하에서 과도한 자본시장의 개방, 정부의 외환정책 실패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말레이시아 경제구조의 특징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1971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에 끝난 신경제정책(NEP)을 통해 수출지향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꾸준한 수출증가와 공업화로 말레이시아는 80년대 후반 이후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이 9.0%대에 달하는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며 서방 선진국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90년대 초반에도 연 8.5% 이상의 경제성장률로 탄탄한 성장가도를 달림으로써 동남아의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떠올랐다.

신경제정책은 수출산업의 적극적 개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개발 및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확산되는 제조업부문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신경제정책은 1969년 종족폭동을 계기로 입안된 경제정책이었다. '사회 재구조화'(social restructuring)를 목표로 정부가 종족갈등의 제1원인으로 파악한 종족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말레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의 차별정책(Bumiputra Policy)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1차 상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외환사정이 개선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통한 산업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 80년대 이후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산업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노동인력은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몰렸고 인프라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를 늘려 갔다.

말레이시아 경제구조의 변화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산업

구조의 변화이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차산업이 GDP 대비 11.7%, 1차산업이 43.7%인 전형적인 농업경제 구조에서 1995년 2차산업이 37.8%, 1차산업이 21%로 전환된 산업구조전환을 경험하였다. 둘째, 수출구조의 변화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주석, 고무, 원유, 목재 등 일차 상품의 수출비중이 80% 이상에 달하였으나 1980년대 공업화 추진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공산품이 총수출의 70%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기 및 전자제품은 국가 총수출량의 60%를 차지하였다.(박영호 1999, 6) 셋째, 자본시장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안정된 정치환경과 지리적 이점,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8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조치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정부는 1986년 투자진흥법을 제정하고 전세계 3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어 외국기업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³⁾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 14개 사무소를 만들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국가로 승승장구하던 말레이시아도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되어 이 지역을 휩쓴 경제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구조의 문제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을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다. 80년대 후반에는 외국인투자와 수출의 빠른 신장에 의한 고도성장이 가능하였으며 90년대 들어 내수부문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의 뽀족순환(virtuous cycle)형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외국 기업의 기술이 국내에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상호연관성도 낮

3) 투자진흥법은 우대할 산업분야를 지정, 적극적으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대지역, 대업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ttp://av5900.khan.co.kr/hd/owa/nationpkg> (검색일: 1999. 8. 4)

게 나타났다. 그 결과 토착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 무역은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자원수출에서 보전하였다.(박번순 1998, 86)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문제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엔화약세와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격화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성장률은 95년 26.0%에서 5.7%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GDP성장률은 95년 9.5%에서 8.2%로 하락했다. 경상수지적자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95년에는 한해 적자규모가 GDP의 8.4%선인 7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96년에도 5.3%를 기록하였다. 수출둔화와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로 말레이시아정부는 긴축정책을 도입하여 경기연착륙을 도모하였으나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단기외채를 통해 보존되었지만 경제성장이 높을 때는 외채부담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채규모 그 자체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왕윤중·김완중 1998, 51-52) 그러나 97년 태국의 바트화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아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예외없이 단기성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링기트화에 대한 투매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투기적 환공격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링기트화의 절하방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였으나 링기트화의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말레이시아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경제위기를 함께 겪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기초경제가 비교적 튼튼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도 태국 등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와 비슷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경제 또한 급격한 신용팽창과 은행의 부실자산증가로 잠재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도 부동산 경기의 붕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불량채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금융시스템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본 및 금융자유화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느슨해지자 많은 투자가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등 비교역재 부문에 집중되었고, 부동산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경기악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확대되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는 경제 및 금융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 비교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형적인 농업 및 자원 중심의 전형적인 저개발형 산업구조에서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전환과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유사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면, 양국은 모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왔지만 규모와 운영면에서 말레이시아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태국의 시장규모는 말레이시아에 비해 약 2배 이상 크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우회수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이 많은데 비해 태국의 경우 내수지향형 다국적기업이 많다. 내수형 투자는 소비재산업이나 국내 다른 산업을 위한 소재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의 내수형 투자는 주로 수요가 급증하는 소재부문이 될 가능성이 컸으며 태국 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값싼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고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 해외부채로 남게 된다. 태국의 경우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채가 1991년 333억 달러에서 1996년 말 785억 달러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태국의 외채증가율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높았고, 특히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면에서 훨씬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시간경과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수출 증대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 온데 반해 태국은 그렇지 못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면에서도 말레이시아는 태국에 비해 훨씬 사정이 좋았다.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의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s; NPL) 비율은 1996년 말 4%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태국의 13%에 비해 낮은 것이었

다.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의 금융기관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40개에 달하는 금융회사들은 은행에 비해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출해 왔고 일부는 부동산 부문에 상당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00여 개에 달하는 금융회사들이 무질서하게 경쟁했던 태국에 비해 그 사정은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박변순 1998, 89-9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에 비해 말레이시아의 경제상황이나 경제구조는 비교적 건전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IV.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과정

1. 태국의 경제위기 대응과정

태국정부의 환율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트화의 투매가 지속됨에 따라 1997년 7월 2일 환율제도를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에서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태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과 외국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이어지면서 자국의 외환 및 주식시장이 더욱 불안해지자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고, 1997년 8월 5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한국은행 1997, 18-19)

1997년 8월 11일 IMF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대표들은 동경에서 태국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태국정부는 IMF의 40억 달러 지원을 포함한 총 172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한 후 8월 20일 IMF와 지원조건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IMF는 태국 정부에 대해 재정을 비롯한 통화, 환율 등에 대한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한국은행 1998, 91) 태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 IMF의 對 태국 지원조건

거시경제목표	실질 GDP 성장률: 2.5% → 3.5% 소비자물가상승률: 7.0% → 8.0% 경상수지/GDP: 5% 적자 → 3% 적자 재정수지/GDP: 1% 흑자, 외환 보유액: 245억 달러
금융부문	부실금융기관 정리, 자기자본비율 강화 금융기관 감독강화, 부실채권 공개강화
재정정책	균형재정 유지, 부가가치세 인상 (7%→10%)
규제완화 및 민영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및 에너지, 통신, 인프라 사업 민영화 추진

* 출처: 권을, " 동남아경제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 『대외경제정책연구』 , (1998 여름), p. 126.

태국은 IMF 프로그램 초기에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치중하여 경제위기가 보다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차왈릿 수상의 연립정권은 정치적 인기애 연연하여 경제에 단기간적으로 충격이 큰 부실투자회사의 폐쇄보다는 일부 회사에 대한 단순업무 정지 조치 및 회생을 위한 자금지원책을 선택하였다. 또한 국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유류세 인상조치를 철회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재무장관이 사퇴하는 등 초기에 개혁을 진행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정책으로 태국경제는 안정을 찾지 못하였으며 결국 차왈릿 수상이 경제정책에 대한 실정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었으며 추언 립파이가 후임수상에 취임하여 IMF와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적극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태국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살펴보면, 금융부문 개혁은 태국경제개혁의 핵심으로 태국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태국은 1997년 10월 14일 금융위기 해소 및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금융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실 금융회사의 관리를 위한 금융재건청(Financial Restructuring Authority: FRA) 및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MC) 신설,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예금주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어 대량인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산하의 금융기관개발기금(Financial Institute Development Fund: FIDF)의 보험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이상의 제도를 바탕으로 태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유도, 추가부실 방지 등을 금융구조조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둘째,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을 살펴보면, 태국정부는 기업의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권의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태국의 기업채무조정은 금융기관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태국정부는 금융개혁과 기업채무조정을 통해 붕괴된 시장경제시스템을 재건하고 금융시스템내의 신용거래와 민간부문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재정건전화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안정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긴축적 운용을 추진해 왔다. 태국은 당초 1997, 1998 회계연도 중 1,000억 바트 규모의 정부지출을 삭감키로 하고, 세수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는 한편, 주류 등 사치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태국은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환율의 안정과 물가 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축적으로 운용하였으며 내국인, 해외거주 교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환보유액의 확충과 외채 만기구조의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넷째, 민영화 정책인데, 태국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의 對 태국 지원조건의 하나로 우선적인 대상분야는 통신, 에너지 및 운송 등 인프라 부문이다. 태국의 민영화계획은 IMF의 지원조건이행이라는 소극적인 측면과 태국경제의 효율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태국의 국영기업은 통신, 상수도, 에너지, 수송, 기타(서비스, 농업, 금융기관 등) 5개 분야에 59개의 국영기업이 있었다. 태국정부는 먼저 민영화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이 국영기업

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하였다. 또한 시장내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법을 도입하여 두 회사가 합병 혹은 담합을 하여 시장지분을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은 금융부문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1998년 전례없이 마이너스 10.4%의 실질 GDP 하락이후 1999년 초부터 경제회복의 긍정적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9년에 4.1%로, 2000년 2/4분기에는 6.6%까지 상승했다.(EIU 2000) 경제상황 악화로 1997년 중반 이후 유례없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실업률도 태국이 경제위기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Tasker 2000, 62) 이처럼 태국 경제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생산 증가와 수출 호조, 국내수요의 증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결과이다. 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원동력은 수출이었다. 경제회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와 제조업 생산부문도 1998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ADB 2000, 113) 이와 같은 순조로운 경제회복에 힘입어 태국은 2000년 6월 19일부로 IMF체제를 졸업하였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이미 1999년 6월 외환유동성이 개선되면서 IMF로부터 자금인출을 중단한 태국은 IMF관리로부터 공식 졸업하게 되었다.⁴⁾ (IMF 2000)

2.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과정

태국의 바트화로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도 동남아를 휩쓰는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대외여건악화와 금융불안이 나타나자 단기성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링기트화에 대한 투매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투기적 환공격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링기트화의 절하방지를 위해 1997년 7월 9일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나 14일 방어를 포기하였고 7월 24일에

4) 태국 경제는 1999년의 성과에 비춰 볼 때 2000년에도 순조로운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00년 2/4분기의 성장률 6.6% 및 수출, 소비, 제조업, 관광, 민간투자까지 대부분의 지수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IU 2000a 및 Crispin 2000 참조

는 38개월만에 최대인 달러 당 2.65 링기트를 기록하였다. 이에 마하티르 수상은 동남아 외환위기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환투기자들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자 링기트는 더욱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환율에 대한 별다른 개입 없이 환율은 계속 절하되어 12월에는 1달러 당 3.88 링기트에 이르러 6월 30일 환율에 비해 40% 이상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보다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97년 1/4분기의 쿠알라룸푸르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1,300을 상회하였으나, 태국의 금융불안이 시작된 3월 이후 주가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7월 하순까지 1,000을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증권 투자 유입액은 1997년 2/4분기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92년 이후 계속된 초과유입현상이 역전된 것이었다.(Jomo 1998, 181)

통화가치와 추가하락으로 말레이시아 경제도 여지없이 침체에 빠지게 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8월 28일에 100개의 우량주에 대한 공매(short-selling)를 금지하고 9월 4일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건설계획을 연기하였다. 위기 초기 말레이시아도 여타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경제정책 기조가 비슷하였다. 말레이시아는 IMF의 지원을 거부했지만 고금리와 긴축재정 등을 채택함으로써 IMF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수준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화가치 하락이 가져올 물가상승, 금융기관 부실화, 외채상환 부담 가중, 외자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 및 재정 긴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 12월 5일에는 재정긴축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긴축정책 이후에도 외환 및 주식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였다. 또한 신용경색으로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이 계속되었으며 단기자본 유출이 지속되는 등 실물과 금융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상황이 악화되었다.(김완중 1999, 2)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 이후 채택한 IMF식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1998년 1/4분기 들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하였다.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심화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년 6월부터 경제정책기조를 경기부양정책으로 전격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종전의 환율방어와 물가안정을 위한 금

음긴축에서 지급준비율 및 은행대출금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완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 기초변화에 대해 미국과 IMF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외환 및 주식시장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년 9월 1일 전격적으로 외환통제를 단행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을 분리하고 자본유출을 봉쇄하고, 9월 2일 링기트화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에서 1달러 당 3.8 링기트로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로 전환하는 자본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본통제 정책의 취지를 환율안정과 유동성 확대를 통해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하고, 단기적인 투기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자본통제정책의 핵심은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이 링기트화를 차입하여 투기적 공격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대외계정의 자금이체 통제,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링기트 증권의 매각대금은 대외계정에 유지하며 1년 이상 보유한 링기트화 증권매각대금만 유출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자본통제정책의 최종 목적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었다. IMF형 긴축정책은 고금리를 유발하여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신용경색이 나타나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다시 생산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자본유출과 환율급등 등 대외균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본통제와 고정환율제를 시행하여 대외 영향없이 국내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을 증가시키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경기회복 및 부실채권을 감소시키고 경기주체들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갔다. 대외계정을 동결함으로써 링기트화에 대한 투기를 막고 자금의 잠재적인 유출을 억제하였다. 또한 통화량 확대, 이자율 인하유도 등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다.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정책은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현실화되는 데 그쳤고 그것도 경상수지 흑자 등을 통해 상쇄되면서 뚜렷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다. 자본통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율인상에 대

한 우려없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고,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은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2월 4일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본통제 완화조치는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자를 유인하고, 자본통제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했다. 1999년 8월이면 자본통제조치 유효기간(1년)이 도래하는데 그 시점에서 외자의 대거이탈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완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대응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 속에서 금융 및 기업 부문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실은행의 국유화와 유동자산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도하였다. 금융개혁의 큰 줄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이를 위한 부실채권 처리였다. 1998년초에는 부실채권 매입 및 은행자산 통제를 위한 다나하르타(Danaharta)와 은행에 대한 자금 제공과 은행통합 및 합리화를 돕기 위한 다나모달(Danamodal)을 설립하였고, 기업채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채무조정위원회(CDRC) 등을 설립하였다. 1999년 7월 29일에는 금융체제 합리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999년 6월 말 각각 21개, 25개, 12개인 국내 상업은행, 파인낸스사, 머천트뱅크를 각각 6개씩으로 통폐합하고 이를 6개의 대형그룹에 각각 분야별로 1개씩 편입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라얀 은행(Malayan Banking Bhd) 등 6개 은행을 주도은행으로 선정하였다.(정재완 2000, 41)

둘째,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파산기업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산상태에 직면한 기업 중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은행 내에 민간 채무구조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경제위기 초기에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정책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하고부터는 공기업의 민영화보다는 국영기업을 활용한 민간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개혁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피고용자연금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등 국영기업을 활용하고 있다.(김완중 1999, 9-10)

말레이시아는 최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뚜렷한 자본유출 없이 괄목할만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7.5%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말레이시아 경제는 1999년에는 실질 GDP성장률이 5.4%, 2000년 1/4 분기에는 11.7%로 상승하며 건전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ADB 2000, 99) 이와 같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실업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1998년에 3.2%에서 1999년에는 3%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에는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Jayasankaran 2000, 30)

V.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의 배경요인 비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IMF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회생을 추진하는 방식과 둘째, IMF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은 첫 번째 방식을, 말레이시아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방식으로 경제난 타개를 추진했다. 경제위기라는 동일한 충격에 서로 상이하게 반응한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특징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표 2> 태국과 말레이시아 경제위기 대응정책 비교

	태 국	말 레 이 시 아
대응정책	IMF프로그램 추진 긴축재정, 대외신인도 회복 최우선 고금리 정책 추진 단기 외채 감축 적극적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독자적인 방식 추구-자본통제 국내 경기부양 최우선 저금리정책 추진 통화확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

* 출처: 박번순, "말레이시아 자본통제정책의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http://econdb.seri-samsung.org>. (검색일: 1999. 11. 15)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태국은 개방과 자유화, 선 구조조정-후 경기부양 정책을 골자로 하는 IMF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경제회복을 추진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IMF 처방을 거부하고 자본통제와 고정환율제, 선 경기부양-후 구조조정이라는 말레이시아만의 독자적인 경제난 극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기 상이한 정책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1999년 이후 양국 모두 경제상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표 3>에 나타나듯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모두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실물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성장세로 전환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부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초기 걱정했던 것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경제성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난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국의 방식이 옳았는지, 말레이시아의 방식이 옳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응방식의 선택을 떠나 어떤 배경요인이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서로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표 3〉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최근 경제동향

2000년 수치는 1/4분기 수치임

	실질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억달러)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태국	-10.0	4.1	5.3	8.0	0.7	0.8	142	113	34.1
말레이시아	-7.5	5.4	11.7	5.3	2.5	1.5	93	126	28.2
	환율			주가지수			외환보유고(억달러)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태국	36.65	37.84	37.8	355.8	481.9	400.3	288	348	323
말레이시아	3.92	3.8	3.8	586.1	812.3	974.4	262	309	339

* 출처: 재정경제부, 외환위기국의 최근 경제동향 비교 참조
<http://www.mofe.go.kr>. (검색일: 2000. 7. 24)

첫 번째 배경요인으로는 경제 상황과 구조적 차이를 들 수 있다. 먼저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경제상황을 보면, 말레이시아는 외환보유고나 외채 규모 및 만기구조에서 태국에 비해 양호했다. 1997년 말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17억 달러로 태국의 90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였으며⁵⁾, 외채규모에 있어서도 태국의 경우 934억 달러로 단기외채 비중이 37.3%였지만, 말레이시아는 447억 달러로 그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28.5%로 외채규모나 단기외채의 비중이 태국에 비해 모두 낮아 외환유동성 확보에 있어서도 우월한 상황이었다.(권올 1998, 7) 외환유동성문제가 태국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국내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부채는 GDP 대비 165%선으로 태국의 155%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경우 IMF형 긴축정책보다는 국내 경기부양과 금리안정이 더 시급한 과제였으며 태국의 경우 외환유동성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IMF의 지원이 불가피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말레이

5)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고는 3개월 이상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었으나 태국(1.8개월)은 경상거래에서도 지급불능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91년 이후 매년 40억 달러 이상 유입되어 태국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에 비해 증권투자 유입규모는 태국에 비해 훨씬 작았다. 직접투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장기투자라면 증권투자는 상대적으로 단기투자이므로 말레이시아는 태국에 비해 외화자산에 의한 경제 교란 가능성이 더 작았다고 할 수 있다.(박번순 1998, 88-95) 금융부문의 건전성 면에서도 말레이시아가 태국에 비해 우수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의 부실여신(NPL) 비율은 96년 말 4%정도로 이는 태국의 13%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 금융부문이 비교적 건실할 수 있었던 것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외환 통제를 철저히 실행하고, 단기성 해외차입 역시 외화 가득률이 높은 기업에 한해 허용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배경요인으로 정치체제 및 리더십 성향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당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연정파트너간의 갈등과 야당의 잦은 불신임안 제출로 정치는 불안정을 면치 못하였으며 실제로 90년대 이후 다섯 차례나 정권이 교체되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말레이계 정당 UMNO가 여타 종족대표 정당들과 거대정당연합을 구성하고 독립 이후 줄곧 집권해왔다. 이와 같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치 구조적 차이는 바로 1997년 양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태국의 경우 경제위기의 책임을 몰어 1997년 11월 정권이 교체되었다. 새롭게 집권한 추언 립파이 수상은 경제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정실주의 등 과거의 정치관행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지적했으며 이는 태국의 정치·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들이 현재와 같은 경제 몰락을 불러왔다는 IMF의 지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IMF로 대변되는 서방의 지적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하티르 수상은 1981년 수상직에 오른 이후 20여년 가까이 집권해왔다. 따라서 마하티르 수상의 경우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경제위기의 원인이 서구가 지적한 잘못된 과거의 관행들에 있다면 마하티르 수상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웠다. 마하티르는 지난 20여년 간 국가경제를 이끌며 쌓아온 자신의, 그리고 UMNO의 업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IMF식의

처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IMF의 지원을 받을 경우 기존의 정책노선과는 다른 IMF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경제정책에서의 자율성을 제한받는다라는 사실은 마하티르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 구조적 차이 외에도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 성향의 차이 또한 양국의 상이한 대응의 배경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반서방 감정을 지닌 마하티르와 개혁 성향을 지닌 추언의 리더십 성향의 차이는 양국이 상이한 경제위기 대응책을 수립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자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아시아적 가치'가 비판받을 때 유일하게 대항한 아시아의 지도자는 마하티르였다. 마하티르는 경제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이 IMF의 지원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을 때 IMF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서방진영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며 자율적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을 택하였다. 마하티르는 자서전에서 "서구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거론한 부정부패, 정실주의, 독과점, 인재부재, 불완전한 금융시스템과 관행들은 이미 수 십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빨리 나라를 발전시켜 왔다. 물론 부정부패와 뒷거래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아시아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정실주의가 오늘날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서구가 지적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부정하였다.(마하티르 1999, 376-377) 마하티르는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독립을 잃었을 것이다. IMF방식은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다. 내게는 그것이 식민주의다. 경제를 장악하면 결국 정치도 장악하게 된다. 바로 인접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IMF구제금융은 '경제적 식민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에머슨 1999, 33)

반면 추언 태국 수상은 마하티르와는 정반대로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해석하고 있다. 서방국이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조장했다는 '음모론'에 대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기초가 튼튼하고 투명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환란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함영준 1998) 또한 이제까지 고속성장을 해

은 아시아 국가들의 낙관주의가 경제파멸의 원인이며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직시하고 관료주의의 비능률성, 정책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부족 등 정치적, 통치적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법, 정치, 행정, 그리고 거시경제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태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추언은 부실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이처럼 태국은 개방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추언은 'IMF 모범생'으로 불렸다. 또한 추언 수상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데 APEC 정상회의의 기조발언을 통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해야 하며 경제침체를 이유로 수입을 억제하거나 자본이동에 제한을 두어선 안되며 국제자본 거래대처와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후진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기 1999)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경제위기 발생과 함께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정치 및 경제구조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각 개방과 통제라는 서로 상이한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선택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다른 경제위기 대응방식을 택하게 된 배경요인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유사한 경제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경제위기 충격에 정반대로 대응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발도상국들이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최고정치지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국의 경제위기 대응의 차이를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국의 상이한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각자의 경제위기 대응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양국의 정치체제와 리더십, 경제구조, 경제위기 대응과정의 차이를 차례

로 비교해 봄으로써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서로 다른 경제구조와 상황, 그리고 정치구조와 리더십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양국의 대응방법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지금까지의 문헌들은 경제위기원인을 경제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진단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경제위기 대응이 태국과 말레이시아간에 극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도 외환보유고 수준과 해외투자유형의 차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의 대처방식은 경제적 요인은 물론이고, 정치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정치경제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주장이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이 아직 국가가 경제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정치에서 의회 및 정당정치 구조와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 성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치적 배경요인들은 그대로 경제위기 대응 정책의 차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태국의 잦은 정권교체와 과반수정당의 부재, 말레이시아의 장기집권정당의 존재, 그리고 추언수상의 개혁개방성향과 마하티르 수상의 민족주의성향 등은 태국이 IMF 방식을 받아들이고, 말레이시아는 거부했던 대응방식의 차이를 만든 중요한 정치적 배경요인이었던 것이다.

끝으로 개혁과 개방을 택한 태국이나 자본통제 방식을 택한 말레이시아나 대응방법은 달랐지만 1999년 이후부터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모두 아직 경제회복을 확실할 단계는 아니다. 태국의 경우 2001년 1월의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경제부문도 영향을 받아 개혁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하티르 이후의 후계구도가 정해지는 등 정치권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고정환율제의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부실채권의 비율도 높은 편이라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책 중 어느 방법이 옳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태

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연구를 통해 양국의 상이한 경제정책 수립이 단순히 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양국의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현실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덕, 1999. "회복기에 접어드는 태국경제." 『KIEP 세계경제』. 6월.
- _____, 2000. "태국의 IMF지원 졸업의 의미와 향후 경제정책방향." 『KIEP 세계경제』. 3월.
- 권을, 1998. "동남아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 여름호.
- 김완중, 1999.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정책 평가와 최근 경제정책변화." 『KIEP 세계경제』. 4월.
- 김홍구, 1999. 『태국학입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현기, 1999. "아시아의 재도전: 태국 개혁을 이끄는 추안총리." 『조선일보』. 7월 1일.
- 노상욱, 1998. "태국의 금융·외환위기." 『나라경제』. 3월.
- 마하티르·최우철 역, 1999.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회고록." 『월간조선』. 8월.
- 박변순, 1998. "동남아 외환위기 속의 말레이시아 경제." 『삼성경제』. 1월.
- _____, 2000a. "IMF 졸업한 태국의 경제상황." 『World Report』. 6월 26일.
- _____, 2000b. 『동남아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호, 1999. "ASEAN 주요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 『KIEP 세계경제』. 12월.
- 박은홍, 1998. "성장과 위기, 국가-기업 연결망의 두 얼굴." 한국정치연구회 편.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서울: 삼인출판사.
- 박재봉, 1998. "말레이시아의 경제." 양승윤 외. 『말레이시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서동혁·이혁기, 1999.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동남아 산업협력." 『KIEP 정책자료』. 8월.
- 송민선, 1998. "말레이시아 외환규제, 통화위기의 해결책임가." 『LG 주간경제』. 9월 30일.
- 양승윤 외, 1998. 『말레이시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에머슨, 토니, 1999. "마하티르의 승부수." 『뉴스위크』. 9월 1일.
- 왕윤중·김완중, 1998. "아시아 외환위기국의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 가을호.

- 윤진표, 1998. '태국의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국제문화연구』. 16집
- 이선향, 2000. 『마하티르의 도전』. 서울: 학문과 사상사.
- 정영국, 1996. "말레이시아의 협의민주주의와 UMNO의 정치."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서울: 서울프레스.
- 정재완, 1999. "말레이시아, 총선의 의미와 경제전망."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12월 6일.
- _____, 2000. "말레이시아 금융구조조정 추이와 과제."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2월 21일.
- 한국은행, 1997. "태국, 경제종합대책 발표." 『주간해외경제』. 32호.
- _____, 1998.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시사금융』. 8월.
- 한국태국학회. 『태국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 함영준, 1998. "추안 총리 태국경제 회복 낙관, 신축적 정책 추진." 『조선일보』. 10월 20일.
- ADB, 2000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0: Thailand.
- _____, 2000c.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0:Malaysia.
- Arndt, H.W. and Hall Hill, 1999. Southeast Asia's Economic Crisi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Bunbongkarn, Suchit, 1999. "Southeast Asia After the Crisis: Thailand's Successful Reforms." *Journal of Democracy*. Vol.10. No.4.
- Bunyamane, Soonruth, 2000. "1999 Year-End Economic Review : Hoping for a Big U." The Bangkok Post. January 4.
- Crispin, Shawn W., 2000. "Trouble Brewi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5.
- Delhaise, Philippe, 1998. Asia in Crisis. Singapore: John Wiley & Sons.
- EIU, 2000a. Country Briefing: Thailand. April 5.
- _____, 2000b. Malaysia: Country Outlook. May 15.
- IMF, 2000. "Thailand : Selected Issues." IMF Staff Country Report. February.
- Jayasankaran, S., 2000. "Economic Monitor : Malaysia - Miracle Cur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1.
- Jayasankaran. S and Michael Vatikiotis, 1999. "Wake Up Cal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2.

Jomo. K · S., 1998. *Tigers in Troubl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Milne, R.S. and Diane K. Mauzy, 1999. *Malaysian Politics Under Mahathir*. London: Routledge.

Pasuk, Phongpachit and Chris Baker, 1999. *Thailand's Boom and Bust*. Bangkok: Silkworm Books.

Pempel, T.J., 1999.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Shameen, Assif, 2000. "Malaysia's Stock Market Slip-sliding Away." *Asiaweek*. June 10.

Tasker, Rodney, 2000. "Economic Monitor: Thailand - Perilous Recover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22.

Vatikiotis, Michal, 1998. "Thailand : Out of the Darknes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1.

Political Economy of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A Comparative Study on Thailand and Malaysia

Jinpyo Yoon and Eunyou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litical economic factors to have Thailand and Malaysia take different responses to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In spite of similar economic structures, Thailand and Malaysia responded in opposite manners to the economic shock. Thailand chose the policy of open-market restructuring following the IMF prescription, whereas Malaysia took the measure of capital control and fixed exchange rate rejecting the IMF recommendation. Those different choices are not enough to be explained only by economic terms. Political factors such as political structure and leadership character should be also considered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because both Thailand and Malaysia depend heavily on the state that takes the respon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analysis of real world problem, this paper put emphasis on political economic approach to explain the causal relationship of political economic factors and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At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ailand called on the IMF for the bailout fund and accepted tight economic policies and

restructuring of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required by the IMF. Thailand implemented reform policies according to the IMF imperative. Malaysia, however, rejected the IMF programs and sought its own way like capital control measure to refrain from capital outflows and fixed exchange rate system to protec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short, Thailand took the pro-IMF stance and Malaysia took the anti-IMF stance.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reason why they went in opposite ways.

Thailand and Malaysia experienced rapid and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since mid-1980s through aggress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lthough they have similar economic structures, Thai economy has relied heavily upon short-term financial investment and Malaysian economy has induce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manufacturing. It means that Thailand has been more vulnerable to the attack from foreign speculative capital than Malaysia.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ailand concentrated their management on the Thai domestic market, whereas those in Malaysia invested mainly for export. Consequently the typ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alaysia was more helpful to absorb the economic shock than that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Malaysia had relatively low short-term external debt and maintained adequate foreign reserves to meet the speculative attack. But the ratio of short-term external debt of Thailand continued to be high and the foreign liquidity was in serious danger. For these economic reasons, Thailand was obliged to accept the IMF assistance and Malaysia was not.

Even if Thailand and Malaysia share constitutional monarchy and multiple party system, two countries are quite different in terms of political mechanism and leadership style. In Thailand, political parties

are still nothing but means of strong personalism through which factional interests are secured. Since Thai political party system consists of many small-sized parties, the government used to be formed with coalition parties. So it is usual that the coalition government has been plagued with political instability. However, Malaysian government has enjoyed political stability sustained by UMNO, the dominant ruling party of Malay people. Despite of multiple party system derived from various ethnic groups and religions, Malaysia has constituted the stable national front in which UMNO is admitted as the hegemonic party with close assistance of Indian MIC and Chinese MCA.

The political leadership is also quite different. Thai prime minister Chuan Leekpai has shown progressive character to support market-oriented reforms. As the newly appointed prime minister after the resign of Chavalit Yongchaiyut, Chuan Leekpai was relatively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has shown nationalistic character to emphasize 'Asian values against Western imperialism'. Mahathir contended that Asian economic crisis was attributed to greedy Western speculative capitalists. Compared with Thailand which is accustomed to frequent regime changes, Malaysian ruling party should take the full charge of the economic crisis and admit their fallacy if they accepted the IMF bailout fund. It would be aggravated to the regime crisis. Accordingly Malaysian political leadership could not follow any IMF programs.

In sum, this paper stresses the utility of political economic explanation that the opposite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of Thailand and Malaysia were stemmed from not only economic factors like foreign debts, reserv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but also political factors, more importantly in some sense, such as party politics

152 『동남아시아 연구』 제11권 봄호(2001년)

and political leadership style.

<Key Words>

Thailand, Malaysia, Political Economy, Asian Economic Crisis